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 강화

교사별 학생부 기재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집합 연수를 제공하고 원격 연수 콘텐츠 보급을 통해 교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역량을 제고합니다.

※ 서술형 기재 항목 작성, 학생부 권한 관리, 학생부 민원 대응 등 특정 분야별 세분화된 주제 및 수준의 연수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움자료 확대 보급

(기재요령 개발·보급) 시도교육청 학생부 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현장의 요구 및 초·중등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기재요령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기재 도움자료 개발·보급) 지역, 학교급, 학교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부 기재에 대한 세부내용, Q&A 등이 포함된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술식 기재영역 분량

개별 학생에 대한 내실있는 기재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3,000자~1,700자)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00자~500자)의 입력 가능 글자 수를 축소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운영

현장 교원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학생부 개선 사항 의견수렴, 단위학교별 자체 연수 등에 도움을 주는 시도교육청별 학생부 현장실무지원단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지원센터' 운영(20~)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학생부 민원응대, 교사 질의 회신 등을 담당하는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회 이상 확인·점검합니다.
- 교육청에서는 매년 소속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합니다.

▶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행위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됩니다.

▶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학생부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 간 보관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권한부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달라진만큼 철저하게!

